

정부, 전방위 물가 관리… 식품기업, 비용절감 등 생존 경쟁

물가억제 정책·담합 수사 등 압력
올림픽 특수 저조… 실적개선 비상
식품업계 “원가 상승환경 고려해야”

식품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사정기관 합동 점검과 담합 수사, 세무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며 가격 인상 여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매출을 끌어올리던 올림픽 특수마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업계는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으로 버티는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11일 출범시키고 설탕·밀가루 등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담합과 불공정 거래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원재료 가격 뿐 아니라 유통 단계별 거래 구조와 시장 집중도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TF는 이재명 대통령이 먹거리 물가 점검을 직접 지시한 지 6일 만에 구성됐다.

이미 압박은 현실화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공식품·생필품 제조·유통업체 103곳을 조사해 탈루 소득 3898억원을 적발하고 1785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주류·빙과·라면 업종



1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설탕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에서만 약 1500억원이 부과됐다. 오비맥주는 판매점 리베이트 약 1100억원을 광고비로 처리한 정황이 포착돼 1000억원의 추징금을, 빙그레는 특수관계법인에 물류비 250억원을 გადა 지급한 혐의로 200억원대 세금을 부과받았다.

검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제분업체 7곳은 약 5년간 6조원 규모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됐고, 제당 3사 역시 약 4년간 3조2715억원 규모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 제재와 부당이익 환수, 추가 과세까지

검토 중이다.

업계는 정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부담을 호소한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담합 단속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원가 상승 환경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단순 물가 억제 중심 정책이 반복되면 시장 왜곡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가격 인상 대신 인화와 할인으로 대응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최근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평균 5% 안팎 내렸고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 등도 4~6% 수준 인하를 결

정했다.

그러나 원재료 가격 하락이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원맥 가격이 2022년 대비 22.6% 하락했지만 라면 가격은 7.4% 상승했고, 빵 물가지수도 19.4% 올랐다. 대두 가격 역시 41.3% 하락했지만 대두유 가격 하락폭은 19.2%에 그쳤다. 기업들은 인건비·물류비·에너지 비용과 환율 부담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수익성도 악화됐다. 식품업계를 대표하는 CJ제일제당의 영업이익은 15.2% 감소했으며, 빙그레·롯데웰푸드·오뚜기 등은 20~30%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매출 감소보다 비용 상승이 이익 악화의 원인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내부 긴축에 나섰다. 생산 공정 효율화, 원부자재 공동 구매, 저수익 품목 정리, 마케팅 비용 축소, 신제품 출시 속도 조절 등이 대표적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원가 부담이 높은 일부 맥주 제품(생맥주)을 단종했고, CJ제일제당은 비핵심 자산 유동화와 예산제로베이스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 대형 스포츠 이벤트 특수까지 약해졌다. 지난 7일 개막한 ‘2026 밀라노·코르티나남매초 동계올림픽’을 두고

업계에서는 “예전 같은 특수는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에는 국가대표 경기 당일 치킨·피자 배달 매출이 평소보다 20~30% 증가했지만, 최근에는 국민 관심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효과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종합편성채널 단독 중계로 시청 접근성이 낮아지고 주요 경기가 새벽 시간대에 편성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기업 마케팅 참여도 눈에 띄게 줄었다. 이번 올림픽에서 적극적인 후원을 유지한 곳은 CJ그룹, 오비맥주 카스, 파리바게뜨 정도다. CJ그룹은 선수단 도시락 식재료 지원과 코리아하우스 홍보관 운영에 나섰고, 파리바게뜨는 전국 매장 에서 응원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오비맥주 카스는 한정판 제품을 출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림픽 특수 기대감도 낮아진 상황에서 마케팅 비용 대비 효과를 확산하기 어려워 예산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분간 대다수 기업이 가격 인상 대신 비용 흡수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여론을 의식해 내부 비용 절감이 사실상 유일한 대응책”이라고 덧붙였다.

/신원진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박정원 회장, 에너지 분야 등 현장경영 분주

〈두산그룹〉

창원·인천 등 주력사업장 방문
“AI 대전환기, 새로운 성장기회”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연초부터 에너지와 첨단소재, 소형장비 등 주력 사업 현장을 잇달아 찾으며 성장 동력 점검에 나섰다. 인공지능(AI) 확산과 글로벌 수요 변화에 대응해 핵심 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행보다.

12일 두산그룹에 따르면 박정원 회장은 전날 경남 창원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업장을 방문해 에너지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최근 수주가 이어지며 생산 일정이 확대된 발전용 가스터빈 공장과 소형모듈원전(SMR) 주기기 제작라인을 중심으로 현장을 둘러보고 경영진으로부터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AI 대전환기를 맞아 에너지 사업 분야에 큰 기회의 장이 열렸다”면서 “그간 축적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11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업장을 방문해 제작 중인 발전용 가스터빈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두산그룹

해서 확대된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2019년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총 16기를 수주했다. 지난해에는 미국 빅테크 기업과 380메가와트(MW)급 대형 가스터빈 5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첫 해외 수출 성과를 거뒀다.

SMR 분야에서도 글로벌 협력이 이

어지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뉴스케일파워,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등과 협력해 주기기와 핵심소재 제작을 맡으며 글로벌 SMR 파운드리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엑스-에너지가 발주한 SMR 16기 주기기와 핵심소재를 시작으로, 뉴스케일파워가 위탁한 초도 물량도 올해 하반기부터 제작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 회장은 앞서 지난 2일에는 두산캣 인천사업장을 찾아 ALAO(아시아·라틴아메리카·오세아니아) 지역 생산 제품의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공장 내 전시된 전동·수소장비와 지게차 생산라인, 연구개발(R&D) 센터 등을 둘러보며 주요 부품 수급 상황과 신제품 상용화 일정 등을 확인했다. 박 회장은 인천, 창원 등의 작업 여건을 꼼꼼히 살피면서 임직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안전에 대해 각별히 당부했다.

/원관희 기자 wkh@

공정위, 설탕 가격담합 철폐 3개 제당사 과징금 4083억

담합사건 역대 두번째 규모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여간 설탕 판매 가격을 담합한 3개 제당사에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사건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로, 사업자당 평균 1361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가 2021년 2월 ~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B2B 거래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사는 설탕의 주원료인 원당 가격이 상승할 경우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합의해 이를 신속히 반영했다.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협력했다.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인하 폭을 축소하고 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했다. 원당가격 하락 폭보다 설탕가격을 더 적게 인하하거나, 인하 자체를 지연하는 방식이었다.

담합은 대표급, 본부장급, 영업임원급, 영업팀장급 등 직급별 모임을 통해 이뤄졌다. 대표·본부장급에서는 개략적인 가격 인상 방안과 협력 방안을, 실무선에서는 월 최대 9차례 모임을 통해 가격 변경 시기·폭, 거래처별 협의 전략, 협상 실패 시 대응 방안 등 세부 실행계획을 조율했다.

각 수요처 협상은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당사가 주도했다. 예컨대 특정 음료·

과자 업체별로 CJ·삼양·대한제당이 역할을 나눠 협상을 이끌고 경과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제당사들은 원당가격 인상을 이유로 가격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가격을 인상하였고, 반대로 원당가격 인하로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가격을 인하하지 않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설탕 산업은 고율 관세와 대규모 설비투자 특성상 진입장벽이 높은 과점 시장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시장 구조를 악용해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면서도 담합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고 판단했다. 1954년 제일제당 설립 이후 부산제당 등 군소업체 몇 곳이 진입하기도 했으나 곧 폐출돼 주로 현재 제당 3사에 의해 유지돼 왔다.

특히 이들 기업은 2007년 동일 혐의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담합을 감행했다. 2024년 3월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에도 1년 이상 담합을 유지하고, 조사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대응을 논의한 정황도 확인됐다. 초기 현장조사에서는 명확한 합의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으나, 내부 보고자료와 메신저 대화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약 1년간 수요처 조사를 병행한 끝에 구체적 담합 구조를 밝혀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식료품 분야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지속된 악랄적인 담합을 제재한 사건”이라며 “최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높은 식료품 가격을 안정시키고 독과점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상승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최태원 “상의 행사 전면중단… 임원진 전원 재신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문성 강화 등 조직쇄신 나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상속에 관련 보도자료의 데이터 신뢰성 논란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조직 전반의 쇄신에 나선다. 신뢰 회복을 위한 고강도 조치로 당분간 주관 행사를 전면 중단하고, 공익과 진실성을 최우선 가치로 재정립하는 내부 개편에 착수한다.

최 회장은 12일 상의 전 구성원에게 서한을 보내 최근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

의 데이터 신뢰성 문제에 대해 깊은 반성의 뜻을 밝히고 전면적인 변화와 쇄신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이 제시한 쇄신 방안은 다섯 가지다. 우선 조직 문화와 목표의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건의 건수와 같은 외형적 잣대가 아닌 지방 균형발전·양극화 해소·관세 협상·청년 일자리·AI 육성 등 국가적 과제에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직 전반의 반성과 성찰을 위해 당분

간 상의 주관 행사를 중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만 국가 차원의 행사와 주요 과제에는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임원진 전원에게 대한 재신임 절차도 진행한다.

최 회장은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내부 정비를 빠르고 단단하게 마무리하자”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